

### 투데이

## 합평읍 대형마트들 “우리 자발적으로 휴업해요”

합평군 대형마트들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매달 한차례 휴업하기로 했다.

합평군은 10일 합평축협에서 관내 대형마트에 속하는 3곳과 정기휴업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매월 한 차례 휴업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대상은 합평읍 중심상권에 위치한 합평농협(조합장 김형모), 합평축협(조합장 임희구) 하나로마트, 합평나비마트(대표 전병열) 등 3곳이다. 이들 마트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조례제정 없이 자발적으로 휴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합평군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관내 대형마트를 상대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성과를 이뤘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합평군 대형마트들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매달 한차례 휴업하기로 했다.

대상은 합평읍 중심상권에 위치한 합평농협(조합장 김형모), 합평축협(조합장 임희구) 하나로마트, 합평나비마트(대표 전병열) 등 3곳이다. 이들 마트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조례제정 없이 자발적으로 휴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합평군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관내 대형마트를 상대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성과를 이뤘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합평군 대형마트들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매달 한차례 휴업하기로 했다.

대상은 합평읍 중심상권에 위치한 합평농협(조합장 김형모), 합평축협(조합장 임희구) 하나로마트, 합평나비마트(대표 전병열) 등 3곳이다. 이들 마트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조례제정 없이 자발적으로 휴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합평군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관내 대형마트를 상대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성과를 이뤘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10월부터 매월 두 번째 일요일에 정기 휴업한다.

합평군 모종준 지역경제계장은 “대도시에서는 대형마트 휴무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기 휴무를 결의한 대형마트들에 감사드린다”면서 “날로 침체해가는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사회복지의 날’ 기념 한마음축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11일 담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축제’에 참석해 사회복지시설 작품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전남 금융기관 역외유출 20조4천억

## 경북 이어 두번째...7년새 13조↑ 규모 급증 김재경 의원 “대형마트 지방장악 영향 심화”

지역	규모(억 원)
경북	25조5000억 원
전남	20조4000억 원
전북	16조7000억 원
경남	16조5000억 원
강원	14조2000억 원
경기	+12조3000억 원
광주 등 6개 광역시	15조 원

(2009년 기준, 자료:김재경 의원실)

전남의 금융기관 자금 역외유출 규모가 20조4000억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수도권 금융 자본의 역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용역보고서를 인용, “2009년 9월 말 현재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금융기관 자금의 역외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유출 규모와 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지

역별 금융기관 자금 역외유출 규모는 경북이 25조50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전남 20조4000억 원, 전북 16조7000억 원, 경남 16조5000억 원, 강원 14조2000억 원 등이었다. 반면 경기도는 9개 도 중 유일하게 12조3000억 원이 역외유출됐다.

특히 전남지역의 자금 역외유출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 원에서 2009년 20조4000억 원까지 7년 사이에 13조 원이나 늘어나는 등 역외유출 규모가 매년 폭증하는 양상이었다. 경북은 2002년 15조7000억 원에서 7년 사이에 9조8000억 원이 늘었다. 광주시 등 6개 광역시의 자금 역외

유출 규모는 15조 원이었다.

김 의원은 “자금의 역외 유출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지역 내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2009년 통계연도 현재는 역외유출 규모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비수도권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 역외유출의 원인으로 지역중소기업 등의 산업기반 취약과 고

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매출 미확대, 지방정부 간 재정자립도 격차 심화 등을 꼽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대형마트와 SSM, 대규모 프랜차이즈 회사가 지방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지역 내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서울이나 경기 등 역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노력에도 지역 금융이 취약해지는 것은 비수도권의 경제기반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을 한국형으로 고쳐 도입하는 등 지방 경제에 ‘투자→생산→소득 증대→소비→추가투자’까지의 선순환이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남도 내년 광특 예산 3820억 확정

### 22개 시·군 포함 6720억

전남도의 내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 지역개발 관련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60억 원 늘어난 3800억 원대로 확정됐다.

특히 22개 시·군에 배정된 광특 예산까지 합치면 6720억 원에 달해 전국 광특예산의 19.7%를 배정받게 됐다.

전남도는 11일 “내년도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예산 3820억 원을 편성,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광특예산은 국가 예산 중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시·도지사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이

다. 일종의 국가에서 지원해준 도비인 셈이다.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포괄보조사업은 문화시설 확충과 운영, 관광자원개발, 체육진흥시설지원,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131건에 959억 원)이다. 또 농림수산 분야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농어업 기반 조성,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농업진흥청), 산림경영자원육성(산림청),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산림청) 등 320건에 1367억 원이다.

이 밖에 환경 분야 165건 857억 원, 중소기업지원 분야 20건 194억 원, 청소년 분야 89억 원, 국토해양 분야 354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오광록기자 kroh@

## 광산구 전국 첫 ‘GIS 정책지도’ 발간

광주 광산구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GIS 지도’를 업그레이드한 ‘GIS 정책지도’를 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GIS 정책지도’란 도시나 국가의 각종 통계수치를 GIS에 입력하면 숫자가 담고 있는 도시·국가의 특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광산구는 지난 8개월 동안 공들여 제작한 ‘GIS로 그리는 광산구 행정지도’를 최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광산구의 도시발전 과정, 행정 현황, 사회·경제적 특성을 한 눈에 보여준다. 지리·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시각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사용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행정적 측면에서는 시각화된 지도를 통해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행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민행배 구정장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할 때 X-Ray, MRI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듯, ‘GIS 정책지도’는 구의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대중교통망 보완, 교육불평등 해소, 문화편의시설 입지선정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캠코’ 사업 실패면 책임 회피 않겠다”

### 강운태 시장-시의회, 본회의서 3D 컨버팅 사업 공방

#### 책임 방식 놓고 설전도

강운태 광주시장은 11일 부실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3D컨버팅(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법인 ‘캠코’와 관련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켜봐야 하지만, 실패하면 궁극적으로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사업이 실패할 경우 선거를 통해 책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선거(민중·북구 1)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진 의원은 강 시장을 출석시킨 뒤 ‘캠코’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8월 한미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는데도 사업을 계속한 진행한 이유를 묻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광주시의 후속조치 미흡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650만 불이

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방법으로 송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몹시 당혹스러웠지만, 이미 투자된 650만 불에 상당한 대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지난해 8월 이후 어떠한 자금도 지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 시장은 또 “감사원이 요구한 조치는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기술 테스트 결과를 보고 조치할 것”이라며 “캠코 사업의 미래는 향후 며칠 안에 결정될 것이고 만일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장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0일 일부 시의원이 제기한 ‘시의회 협박 논란’과 관련해 강 시장은 “간부회의를 담은 CCTV를 확인한 결과 의회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은 결코 없었다” “협박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충질문에는 시장의 책임 방

식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진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 없이 선거를 통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거를 통한 책임의 의미가 무엇이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이번 건은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률행위가 있다면 사법상의 책임을 지겠지만, 법 상식으로 볼 때 정책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강 시장을 상대로 또 한 차례 더 ‘캠코’ 관련 시정 질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 시장은 애초 12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방문, 13~16일까지 미국 김치축제와 위안부 기린비 음악제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전남·북 재난지원금 3차 추가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행정규)은 태풍 ‘텐빈’ ‘볼라벤’으로 피해가 극심한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에 3차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1·2차

지원금(65억 원)이 3차로 4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광주 남구, 나주, 곡성, 전북 남원, 완주, 고창, 제주에는 각 4억씩, 순천, 보성, 무안, 전북 부안은 각 3억씩 지급된다. 또 장성과 전북 정읍은 각 1억씩 지원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하

# 고

서민수부친운차서양원(한국제다대표) 님께서 2012년 9월 11일 오전 9시경 (陰7月25日)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발인일시: 2012년 9월 13일 09시  
발인장소: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금호장례식장(특실 201호)  
장 지: 광주광역시 윤림동 문빈정사

2012년 9월 12일

嗣子 서명민  
女 옥주수

子 婦 김이  
婿 김철지

임장 김이  
광대용 철지희아연귀명민  
철민상신연주라옥주수

(개별부고생략)  
연락처: 직통전화 (062) 227-1438 1  
회사전화 (062) 222-1397 3

당사서민수실장부친께서 2012년 9월 11일 오전 9시경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주)한국제다  
2012년 9월 12일